

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5-119호

「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」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대전광역시의회의규칙』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28일

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

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재정법」에 맞게 제명 등을 정비하고,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재정심의위원회의 구성방법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함
- 나. 인용조문 및 용어를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함(안 제1조).
- 다.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정비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함(안 제2조).
- 라. 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고시 대행 위원을 정함(안 제3조제3항).

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일
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(참조 : 교육
수석전문위원실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
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 · 주소 ·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할 곳 : 우35242 /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

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교육수석전문위원실)

(전화 042-270-5243, FAX 042-270-5249, E-mail : bokdung@edurang.net)

라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FAX, 컴퓨터통신, 직접방문 등

4. 개정 조례안 : 붙임

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명 “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”를 “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를 “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교육국장 순으로”을 “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「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」에 따른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 3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지방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「지방재정법」 제 33조제10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 재정계획심의위원회 ----- -----.
제2조(구성) ① 대전광역시 지방교육재정 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“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 ② 15인의 위원중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10인의 위원은 위촉위원으로 한다. ③ 당연직 위원은 대전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“이라 한다)소속 부교육감, 각 국장, 학교정책과장 및 시설과장으로 한다.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,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. ⑤ 위촉위원은 교육 및 재정분야의 전문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.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 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	제2조(구성) ①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. ② 위원은 본청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과 교육 또는 재정분야 전문가 중에서 대전 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중에서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제3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) ① ~ ② (생략)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	제3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----- -----

관계법령

● 지방재정법

[시행 2015.5.13.] [법률 제13283호, 2015.5.13., 일부개정]

제33조(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,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(이하 "중기지방재정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
3.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
4. 분야별 자원배분계획
5.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
6. 의무지출(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이하 같다)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(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
7.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
8. 통합재정수지[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(純)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] 전망과 관리방안
9.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
10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.

1. 국가의 재정운용방향
2.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
3.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
4.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

⑤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,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⑦ 행정자치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·제2항·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.
-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-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